
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11.19.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
 -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,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* GDP(전기비, %) : ('24.1Q)1.2 (2Q)△0.2 (3Q)0.1 (4Q)0.1 ('25.1Q)△0.2 (2Q)0.7 (3Q)1.2
민간소비(전기비, %) : ('24.1Q)0.5 (2Q)0.0 (3Q)0.4 (4Q)0.2 ('25.1Q)△0.1 (2Q)0.5 (3Q)1.3
통관수출(동기비, %) : ('25.1Q)△2.3 (2Q)2.1 (3Q)6.5 (10)3.6 (11.1~11.10)6.4
-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습니다.
 - 1·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.5조원 지급에 이어 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”을 시행하고 9월부터 상생페이백을 통해 752만명에게 6,430억원을 현금했습니다.
-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“튼튼한 버팀목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
 -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 - 주요 공공기관*도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투자합니다.
- * LH, 한전, 철도공단, 도공, 한수원, 캠코, 수공, 가스공사 등 26개 공공기관
- 아울러, “경제회복의 불씨”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.
 -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 -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습니다.

[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]

- 먼저,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-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.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습니다.
 -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(공공기관 발주) 또는 100억원(지방정부 발주)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넓힙니다.
 -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합니다.
 - * (만점기준) 지역업체 참여비율 20% → 30% 상향 / (배점) 0.8점 → 예시1.0점
 -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.
 - * (입찰자격사전심사) 배점 5점(100점 만점) 신설 / (낙찰자평가) 가점 2점 신설

[공공조달 개혁방안]

- 이와 함께, 공공조달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.
-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*합니다.
 - * (現) 조달청 사전 계약물품 중 선택 → (改) 지방정부가 여러 물품을 검토하여 수의경쟁 계약
-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하여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.

- 또한, 공공조달을 통해 AI 등 혁신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 -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.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